

“장군, 우리 민족 모두의 영웅이자 자부심”

문 대통령, 흥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 추모사

“장군의 귀환, 위기극복 모든 국민에 큰희망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순국 78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흥범도 장군의 삶과 관련해 “조국을 떠나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까지 흘러가야 했던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 동포들의 고난의 삶 속에는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온갖 역경이 고스란히 배어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흥범도 장군의 유해 안장식 추모사에서 흥 장군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치부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조들의 고난을 뒤돌아보며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와 독립전쟁 최대의 승리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흥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산천에 몸을 누이신다”는 말로 추모사를 시작했다.

이어 “장군이 안식을 취할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많은 애국 지사들이 잠들어 계신다”며 “장군과 함께 봉

오동 전투에서 싸웠던 이화일·박승길 지사, 청산리 전투에서 함께 싸웠던 김운서·이경재·이장녕·홍충희 지사가 잠들어 계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열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승리와 희망의 역사’다”라며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기 하나로 모여든 무명의 청년들과 간도 지역으로 이주한 수십만 동포들이 승리의 주역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만든 승리는 나라를 잃은 굴종과 설움을 씻고, 식민 지배에 억압받던 삼천만 민족에게 강렬한 자존심과 자주독립의 희망을 심어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장군은 우리 민족 모두의 영웅이며 자부심이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크졸오르다에 조성된 흥범도 거리와 공원 묘역을 찾고 있다”며 “정부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장군의 묘역 관리 등 고려인 사회의 자부심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문재인 대통령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흥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 참석해 분향하고 있다.

제대로 밝히고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라며 “이직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애국지사들이 많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으며, 가려진 독립운동의 역사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뤘고, 그대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며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 줄 것”이라며 “흥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라는 말로 추모사를 마쳤다.

/뉴시스



“무릎 꿇고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요”

이진 민생당 당대표 후보
호남권 집중 공략 나서

오는 28일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에 출마한 이진 후보가 호남을 찾았다.

이진 전당대회 투표권자는 40만 7천여 명으로 호남에서의 성적이 당락에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진 후보는 지난 16일 화순과 나주 등 전남 지역을 찾은데 이어, 17일에는 광주에서 18일에는 전북지역을 찾아 투표활동을 펼쳤다.

이진 후보는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3당의 기회를 주신 국민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며 “길고 긴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생당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후보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민생당의 정책성과 호남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선후보를 반드시 배출하겠다”며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과 정책대결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캠프를 광주에 마련한 이 후보는 전남은 고향 전북은 학교 광주는 직장으로 깊은 인연이 있다는 연고성을 앞세워 투표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7명의 후보 중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당일투표는 오는 24일에, 25일은 중앙선관위의 K보팅, 26일과 27일은 ARS로 진행되며,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유호상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 2기 21일 출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가 오는 21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 위원회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을 자문하고 학계·언론·국회 등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갖고 수시로 정책 제안도 한다.

위원은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홍보 역량을 갖춘 전문가 150명으로 꾸렸다. 임기는 오는 2023년 8월 20일까지 2년 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권경득 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별도 위촉식은 생략하고 대표로 권 위원장에게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에게는 위촉장과 함께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서한문을 우편으로 송부했다.

권 위원장은 “지역 주민과 소통에 기반을 둔 정책 제안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분권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포용적인 자치분권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하겠다”며 “정책자문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경청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유보 통합' 모델 제시

“시영·국공립 시설 격차 해소, 기관 선택권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8일 “대통령에 당 선되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가 현장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우리 실정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학부모·교직원과 함께 하는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출발선 평등에 입각해 생애 초기부터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보통합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시영시설과 국공립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과 활용도를 넓혀드릴 필요가 있다”며 “우리 아



이들이 행복하고 부모와 교사가 행복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국민 모두에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을 OECD 수준으로 하향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교사의 근무 지속성을 위한 처우 개선 ▲종일반 어린이집·유치원에 상담사 배치 등을 약속했다.

아동 대 교사 비율 축소와 교사 처우 개선은 교사 등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상담사 배치에 대해선 “최근 문제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100명당 10~20%에 육박하다 보니 교사나 부모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 심리상담사를 추가 배치할 경우,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물론 영유아의 문제행동 악화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본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사태가 코로나19 대응의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분부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에서 더는 못 버틴다”며 “정부는 당장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국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특별 정책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관련 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긴급 여야 협상을 시작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지 1년개월이 넘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이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현재의 부실한 공공의료 수준으로는 현재도 미래에도 감염병을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료들이 더는 버티지 못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분부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에서 더는 못 버틴다”며 “정부는 당장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국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특별 정책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탈진하고 지쳐 사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보건의료노동자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 5만6,000조합원)는 지난 17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 신청했다.

전북분부는 산하 9개 지부 중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전북혈액원, 정음아산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의 지부가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정부교섭, 산별교섭, 현장교섭을 진행해왔다. 이들 단체는 쟁의조정 신청 이후 9월 1일까지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2일 전면 총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신용·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로도 납부 가능’

민주 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편의 증진법’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사용자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인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납부방법 및 수단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들과 달리,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제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국세징수법’과 같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 수단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및 수단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 법률상 사용료를 비롯해 과징금과 지체상금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법률에서는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다양화 방안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김종인, 오늘 다시 광주 방문... 5·18 유족회와 간담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8월 19일 광주에서 무릎 사죄를 한 이후 1년 만인 19일 다시 광주를 방문한다.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과 함께 5·18민주유족회를 참배하고, 5·18유족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당 정강정책에 5·18민주유족회등정신 계승을 포함하고, 호남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우선 공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 동서회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회(정운천 위원장)를 당내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호남지역 4개 지자체에 57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자계결연 예산협의, 현안사업 및 법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호남 지자체와 호남 동행의원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5·18단체의 18년째 숙원이던 공법단체 설립을 법제화하는데 크게 기여해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최초로 5·18단체로부터 공식초청을 받아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의원이 주모제와 부활제에 참석할 바 있다.

/유호상 기자